

【문 1】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관할위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의 행위를 기소하였는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입대하여 군인이 된 경우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위 행위는 피고인이 군인이 아닐 때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수개의 관련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더라도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2】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곡물포대를 전달한 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사한 경우에, 조사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참고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면,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③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문 3】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상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다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②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④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없다.
- ㉢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적용된다.
- ㉤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선정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문 5】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에 대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소송행위의 대리는 허용된다.
- ②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심판하지 못하게 된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문 6】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이전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
- ④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써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문 7】다음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8조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적 프로그램저작자인 명의신탁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다.
- ②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③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므로 그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문 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 ④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문 9】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 ②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 ③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의 경우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 10】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②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 ③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문 11】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위법하다.

【문 12】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 ③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문 1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문 14】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소판의주의 하에서 검사의 재량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판의주의의 범위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일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 15】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을 정한다.
-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 ④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 16】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도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 17】다음은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기에 늦은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문 18】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 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 ③ 사고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19】다음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 ㉢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 법원은 당해 피해자·범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문 20】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문 21】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경우에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 ③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문 22】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동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 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사실심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의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④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문 2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공판정의 자백에 대해서도 보강법칙은 적용된다.
-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 고의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문 24】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④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문 25】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③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물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은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1】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③ 민법 제27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

【문 2】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효력이 없다.
- ②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는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통지 이후에 위 수표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를 들어 그 기존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④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는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폐업사실 및 폐업 후 주소지를 채권자에게 신고하지 않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문 3】 동시이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문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바,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될 뿐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다.
- ②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③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는 개별적으로 사후 추인을 한 피대리자 1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④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하에 복수의 미성년후견인이 허용되고 있다.

【문 5】 권리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중측뿐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된다.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은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는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④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임과 같이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며,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따라서 임대중인 건물이 매매된 경우에 그 차임은 임대인들, 즉 그 건물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 소유기간 일수의 비율로 귀속한다.

【문 6】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건물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③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부분'이라고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은 그 연체차임을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문 7】 공유물의 이용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공유자 일부가 제3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 지분의 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의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것을 정할 수 있고, 그 특정부분이 과반수 공유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면 그 특정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문 8】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장권설등기권을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 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장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장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장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직접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 ③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 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18.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경우 2015. 1. 2. X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고, 2018. 6. 5. 위 가등기에 기한 丁 명의의 본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丁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문 9】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되어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 ③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회복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문 10】 매매계약에 관한 아래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설명>

7. 1. 甲의 또 다른 채권자 B는 甲의 乙에 대한 잔금채권 5천만 원을 2019. 6. 1. 가압류하였고, 이에 기해 같은 해 6. 15.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받고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A의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해 A가 X토지에 대해 2019. 7. 1.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乙은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을 2019. 7. 15. 공탁하였다. 2019. 8. 1. B가 乙에 대하여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가지는 구상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나. 甲은 乙로부터 약정기일에 계약금의 일부 7백만 원과 중도금 4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甲은 乙에게 그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 甲은 2019. 6. 1.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X토지의 시가는 2019. 6. 1.에는 1억 7천만 원, 2019. 7. 1.에는 1억 6천만 원, 2019. 8. 1.에는 1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甲은 2019. 7. 1. 전후로 X토지의 시가상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 2019. 8. 1. 현재 乙이 甲에게 구할 수 있는 전보배상액은 1억 7천만 원이다.
- 다. 乙은 약정기일에 계약금의 일부 7백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X토지의 시가상승 조짐이 보이자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乙은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염려하여 2019. 4. 1. 甲에게 중도금 4천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음날 甲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2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면서 X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 ① \neg, \perp, \sqcup
② \neg

【문 11】 물권적청구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 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건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이 없는 전(前)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다.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위 규정에 기하여 침해자에게 방해제거에 드는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다.
- 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부기등기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ㅁ.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그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① \neg , \perp , \vdash , \square
② \vdash , \square
③ \vdash
④ \exists , \square

【문 12】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Y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되고 그에 따라 Y건물에 마쳐져 있던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 甲은 Y건물의 존립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②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토지와 미등기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X토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Y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甲에게 Y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문 13】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그 후 위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乙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경우 甲은 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 ②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③ 甲이 丙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이 丙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임차권으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문 14】 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도급계약에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③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 ④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실제 해제·해지한 때이다.

【문 15】 각종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하다.
- ② 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인의 채권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반드시 그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 ③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가지는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문 16】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 제749조 제1항(수익자의 악의인정)에서 규정하는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위 채권자는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위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甲이 도급인 乙로부터 제3자 丙 소유의 물건을 점유이전 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 17】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제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은 이혼하면서 자녀 丙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乙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甲이 임의로 丙을 양육하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문 18】 甲남과 乙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상호 독립적임)

- ① 甲과 乙이 4촌의 혈족관계인 경우, 甲과 乙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며, 甲과 乙사이에 출생한 丙은 혼인 외의 자(子)가 된다.
- ② 甲과 乙이 2촌의 방계인척관계인 경우, 乙의 동생 丙은 甲과 乙사이의 혼인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乙이 혼인 중 甲의 자(子)를 포태하였다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③ 甲과 乙이, A와 B 사이에서 출생한 15세의 C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과 乙이 혼인한 후 적어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④ 甲과 乙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甲명의로 되어 있는 X건물의 1/2지분을 乙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甲과 乙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 乙은 위 약정을 원인으로 X건물에 관한 1/2지분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 19】 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ㄴ.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19세의 甲에 대하여, 甲의 동생 乙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을 후견인으로 둘 수 없다.
- ㄹ.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ㅁ.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하여는 그 종료심판을 한다.

- ① ㄷ, ㅁ
- ② ㄴ, ㄷ
- ③ ㄱ, ㄷ
- ④ ㄱ, ㄷ, ㄹ, ㅁ

【문 2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③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④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문 2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고,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으로도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발생한다.

【문 22】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 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 ④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문 23】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종중이 종원인 乙에게 부동산을 적법하게 명의신탁하였는데 乙과 丙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丙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비법인사단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 ③ 甲은 자기의 토지 위에 있는 乙소유의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건물의 임대인인 乙을 대위하여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권 및 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어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문 24】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甲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 乙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상계는 허용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④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 2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한 때에 이러한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문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외국민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②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 ④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을 말한다.

【문 2】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처분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 3】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는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문 4】 지역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토지를 일괄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및 요역을 반드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A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A 토지를 B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 승역지와 요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 5】 신청정보의 제공방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이 원칙이다.
- ②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④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 순위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가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 전부를 여러 명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분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없다.

【문 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 ②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등기원인증서인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문 7】 부동산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종중이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새로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거나,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농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 8】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한 경우에는 말소대상의 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 ③ 어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에 앞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한 채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9】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풍에 의함)

- ①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②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병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등기를 회복함에는 독립등기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 10】 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등기관은 촉탁에 따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농지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폐지·인가·종결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
- ②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채무자의 부동산의 권리에 대하여 한다.
- ③ 회생 및 파산 절차의 각 진행 경과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지만, 부인등기의 말소와 같이 예외적으로 회생법원이 촉탁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보전처분, 부인의 등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등의 절차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는다.

【문 1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부여한다.
-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④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외교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문 13】 등기관 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부동산등기법 등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 ② 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류가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 ③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등기신청에서 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④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판결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문 14】 등기신청의 보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으로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등기신청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은 등기신청서의 제공뿐 아니라 보정도 할 수 있다.
- ④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그 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문 15】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되 별개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한다.
- ④ 건물 표제부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의분할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④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을 “재협의를 성립한 날”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실행한다.

【문 17】 다음 중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 ①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 ②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등기
- ③ 예고등기
- ④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문 18】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관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 ④ 저당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문 19】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 사항을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A에서 B, C, D를 거쳐 다시 A로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다른 등기신청이 수리될 수 있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문 20】 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어 그 토지를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된 토지만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구역별로 지번별 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더라도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위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이후,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민자고속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구역을 고속도로 사업주체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지구 내 민자고속도로구역과 나머지 구역의 소유명의인이 상이하게 된 경우, 각 구역별로 지번별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라면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각각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문 21】 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 ②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A, B, C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C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고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누락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 이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문 22】 다음 중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 ① 환매권에 관한 등기
- ②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 ③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④ 지상권설정등기와 신탁등기

【문 23】 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 건물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
- ②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선행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문 24】 등기기록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 ②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의 종원은 종원명부, 결의서, 회의록, 판결문, 족보 등을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종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열람신청인이 해당 종중의 종원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중복등기라는 뜻을 부전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해 발급한다.
- ④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면제한다.

【문 2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이행판결이 아니지만 원·피고에 관계 없이 등기권리자만이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이고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이다.
-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에 대한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도 행정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 1】 다음 법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ㄱ. 법원과 당사자 일방이 부부였으나 이혼한 사이인 경우
 ㄴ. 법원과 당사자 일방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부부인 경우
 ㄷ. 甲 중증의 중증재산 처분에 관한 甲 중증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甲 중증의 구성원인 판사
 ㄹ. A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재판장으로 판결을 한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상고심에 관여하는 경우
 ㅁ. 재판장이 절차를 밟지 않은 증인신청을 철회할 것을 중용하고 변론을 종결할 의향을 표시한 경우
 ㅂ. 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있는 형사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① ㄱ, ㄷ, ㄹ ② ㄴ, ㅁ, ㅂ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문 2】 다음 사실관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합의부사건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도 합의부는 단독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이 乙, 丙, 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乙에 대하여는 9,000만원의 대여금을, 丙에 대하여는 8,000만원의 매매대금을, 丁에 대하여는 7,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각 청구하는 경우, 합의부가 관할권을 갖는다.
 ③ 반소의 제기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소 자체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1개의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를 이유로 각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중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문 3】 다음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 ① 甲으로부터 乙, 丙, 丁 앞으로 X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의 합유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과 丙이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 戊와 丙의 상속인 己를 상대로 X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합유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乙, 丙, 丁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戊와 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중증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중증이다.
 ③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④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문 4】 다음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 ㄱ. 사해행위가 해제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나, 그 목적 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
 ㄴ.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이익이 있다.
 ㄷ.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ㄹ.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ㅁ.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소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가 이유 있어도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ㅁ

【문 5】 다음 소의 적법여부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ㄱ.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친 丙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ㄴ. 甲 주식회사의 포상징계규정에서 대기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을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자동해임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乙이 대기처분을 받은 후 대기처분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자동해임되자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이지만 적법하다.
 ㄷ.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ㄹ.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ㅁ.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면,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르다고 하여도 법률효과가 동일하므로 甲의 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① ㄱ, ㄷ ② ㄴ
 ③ ㄹ, ㅁ ④ ㄴ, ㅁ

【문 6】 소장심사와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소장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 재판장이 이를 정당한 법정대리인으로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 ②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재판장이 인지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하고 그 원본을 법원사무관에게 교부하였으나 아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원고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면서 소장각하명령에 즉시항고한 경우, 원심법원은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지만, 당사자 본인이 상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

【문 7】 처분권주의와 관련한 판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 치료비 상당 손해를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이 그 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③ 甲은 乙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만약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의 심리결과 수동채권인 甲의 손해배상채권액은 5,000만 원, 자동채권인 乙의 대여금채권액은 1,000만 원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 ④ 피고 乙이 유치권의 항변만을 하고 반소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은 원고 甲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乙이 지출한 비용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 8】 변론주의의 사실주장책임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지급청구의 소를 하였는데 심리 결과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대여원리금에 상응하는 액수의 변제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변제항변은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변제 사실은 고려하지 말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 ② 甲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에 관한 甲의 주장은 기초사실에 관한 주장에 속하므로, 법원이 甲의 주장과 다른 산정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한다.
- ③ 甲이 중도금을 乙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는 본안전항변 주장 속에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 9】 다음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원고가 소로써 계약상의 청구를 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그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의 항변 중에서 권리소멸항변에 속한다.
- ② 통상의 형성권은 그것이 소송상 행사되고 나서 소가 각하·취하되더라도 사법(私法)상의 효과가 유효하게 남지만, ‘상계권 행사’ 후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체법상의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 ④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근거로 주위적으로는 상속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상속에 대한 판단이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문 10】 다음 변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지만,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출석 여부에 관한 변론조서의 기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문 11】 송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①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도로상에서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도 적법하다.
- ② 보충송달이 적법하면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부는 문제되지 않지만, 보충송달 후 수령대행인으로부터 본인이 장기간 부재임을 소명하여 신고해 온 경우는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송달받을 자와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일시적인 동거라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동거인이라 볼 수 없다.
- ④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서 부부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으로 보아야 한다.

【문 12】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변론종결된 후 乙은 소송대리인 없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으나,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 지문 중 잘못된 것은?

- ① 망인인 피고 乙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 ② 망인 乙의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으면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된다.
- ③ 乙의 상속인들이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따른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 ④ 乙의 상속인이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아도 수계와 상고는 적법하다.

【문 13】 다음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에 의하여 바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③ 증인은 재판장의 허가가 없으면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 ④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명할 수는 있다.

【문 14】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반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②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 ③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인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반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 문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④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문 15】 재판상 화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재판상 화해는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화해권고 결정도 양 쪽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의 양보는 소송비용부담 부분에 대한 양보만으로도 가능하다.
- ② 제소전 화해의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의 화해계약과는 다르므로 재판상 화해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화해조항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화해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해제할 수 없다.

【문 16】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丙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는 내용의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ㄷ.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ㄹ.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乙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청구소송에서 甲이 다시 乙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ㅁ.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미친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ㄱ, ㄴ, ㅁ

【문 17】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은?

ㄱ.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ㄷ.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

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 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이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취득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① ㄱ, ㅁ
- ② ㄴ, ㄷ, ㄹ
- ③ ㄱ, ㄹ
- ④ ㄷ, ㅁ

【문 18】 다음 청구병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1차적으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2차적으로 그 매매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인도한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는 단순병합이다.
- ②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원고가 주위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병합한 경우 법원이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다.

【문 19】 다음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소송법상 이유에 의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도 한다.

나. 합유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합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공유물의 점유를 빼앗겼거나 방해 당한 경우에, 공유자 측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청구 또는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는 경우 이는 흠이 있는 전부 판결에 해당하여 상소로써 이를 다투어야 하고, 그 판결에서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이러한 판단누락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 ① \neg , \sqsubset
② \bot , \sqsupset , \square

【문 20】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①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원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채무자 乙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무자 乙의 다른 채권자 A는 채권자 甲이 승소하면 자신이 추심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근거로 채무자 乙을 위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는 그 참가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

③ 보조참가인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보조참가신청을 취할 수 있고, 참가신청을 취하함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④ 전소가 화재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문 21】 다음 독립당사자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사해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주장을 한 바 없다면 이는 권리주장참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③ 甲의 본소에 대해 S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丙이 甲과 乙을 상대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丙이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甲이나 乙의 동의는 필요 없다.

④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한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문 22】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된다.

② 피고의 경정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된다.

③ 피고의 경정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 23】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 중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해 등기이전을 받은 제3자는 특정승계인에 포함된다.

②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제3자를 심문하고 판결로서 그 허가여부를 재판한다.

③ 승계참가인이 소송당사자로부터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승계참가의 신청은 소재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피참가인과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신청에 따라 심리한 결과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문 24】 상소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결정의 원본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되더라도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는 당사자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 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③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상고의 이익이 없다.

④ 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2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금전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 심리결과 지연손해금은 제1심보다 줄어들었지만 원본은 늘어난 경우 원본부분은 기각하고 지연손해금은 줄어든 만큼 항소인용하여야 한다.

② 동시이행판결에 있어서 반대급부부분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 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 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소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판단하기에 소자체는 적법하지만 청구기각될 사건이라고 보여질 때, 판례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문 1】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영업주로부터 수권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영업주뿐만 아니라 지배인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같은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

【문 2】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 단일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 3】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광고한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③ 영업양도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이 나 채무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영업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회사는 출자자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문 4】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쌍방적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②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 ③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위 상사채권에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문 5】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상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 ③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문 6】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화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③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등을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안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④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악의로 인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 7】금융리스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본다.
-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8】상법상 회사설립시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 ① 유한회사의 사원
-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④ 합명회사의 사원

【문 9】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 ② 채권자가 분할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전의 분할 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친다.
- ③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문 10】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현물출자사항에 대한 감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감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발기설립시 법원은 감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심사하여 현물출자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 ③ 모집설립시 이사는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발기설립시 감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11】 주주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상법은 주식의 유통성으로 인해 주주가 계속 변동되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확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 ②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사로서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 12】 소수주주의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③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배주주에게 주식의 이전은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 주식의 이전된 것으로 본다.

【문 13】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주제안은 감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주주제안권은 모든 주주에게 인정된다.
- ③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 14】 상법상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그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5】 다음 보기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법원은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 등을 참작하여 그 무효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특별이해관계인은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부당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주주총회결의의 내용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확인 소의 사유가 된다.

라.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중투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에 한하여 채택할 수 있다.
- ② 집중투표제를 원하지 않는 회사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이 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③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 ④ 집중투표의 경우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을 후보자 1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문 17】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원수와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결정한다.
- ③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사에 한한다.
-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문 18】 주식회사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설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이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 ③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 없으나, 어느 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이사의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다.
- ④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문 1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통설·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③ 회사 자금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그로 인한 회사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한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문 20】 상법상 준법지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비상근으로도 할 수 있으며, 회사 내의 다른 업무 중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논외로 함)

- ①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 ②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대주주에게는 30%, 소수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익배당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한다는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3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2】 상법상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은 어느 것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자본전입이 가능하다.
- ②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일이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는 배정기준일이다.
- ③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일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종전 주식에 대하여 약식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질이 설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해 발행된 신주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문 23】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가 금지된다.
-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24】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 ㄴ.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ㄷ. 채무자인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ㄹ.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문 25】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좌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 ②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은 이사 3분의 2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문 1】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 성립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것에 불과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려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③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 형법상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에 대해서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수감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병과규정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 ②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는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 01. 0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되었으므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③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④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문 3】 주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형에 대하여 선고할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②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③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하면서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④ 외국환관리법상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죄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문 4】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 ②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③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문 5】 위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수 있는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단순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심판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문 6】 직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할 뿐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사후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불법 및 책임에 의해 이미 평가되었으므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법률상 감경한 형의 하한인 ‘그 형기의 2분의 1’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할 수는 없다.
- ④ 포괄일죄는 실체법상·소송법상으로 1죄이므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문 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설정을 약정한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협을 초래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인 자동차 등의 이중매매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일한 법리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A에게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여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그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문 8】 위법성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당화된 정범의 행위에 관여한 공범은 처벌할 수 없으나, 위법하나 책임 없는 정범의 행위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 될 수 있다.
- ② 확산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다.
- ③ 장래에 예견되는 침해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다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될 여지가 없다.
-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이 조사한 바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문 9】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0】 형의 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되고 재판상의 가중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가중의 경우 필요적 가중과 임의적 가중이 인정된다.
- ② 작량감경의 방법은 법률상 감경의 방법에 의하므로 작량감경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 ③ 작량감경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법률상 가중·감경을 한 후에는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 ④ 일정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처벌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문1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 ②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은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누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2】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신고 당시에는 신고범죄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나 그 후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13】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 ②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전달자가 그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가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1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A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A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존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②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비록 차용금채무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③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어졌음에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기능 버튼을 눌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④ 소송사기는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기수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문15】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묵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가지게 되어도 무방하다.
- ②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 ③ 행위자 상호간에 범행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문16】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②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나,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선고효력을 잃게 된 경우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은 2016.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04. 01. 확정되었는데, 2018. 10. 02.에 범한 피고인의 범죄를 2019. 03. 10.에 판결할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문17】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이므로, 재산죄에 의하여 취득된 것이라도 재산상 이익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한 후에 그 장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할 뿐, 장물양도죄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 ③ 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 ④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장물로서의 성질은 유지되지 않는다.

【문18】 공무원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로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④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문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뇌물수수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 ③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교사자,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제3자뇌물수수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④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20】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므로, 일회적 사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④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는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문 2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매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 ③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22】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②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문 23】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였다면 법인에 대하여도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세관 검색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검찰에 조사 일정을 문의한 다음 지정된 일시에 검찰에 출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문 24】 공범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② 배임중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③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④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문 25】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명의 경찰관 모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③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하거나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④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